

‘스마트시티 특구’ 1년... 시민 일상에 스며든 미래기술

서울시, 작년 성동구·양천구 지정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정지선 위반 ↓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 만족도 높아

#. 성동구 행당동에 거주하는 중학생 A군은 학원을 가기 위해 항상 건너던 횡단보도가 작년에 ‘스마트 횡단보도’로 바뀐 뒤로 길을 건널 때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 밤에는 집중 조명이 횡단보도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고, 빨간 불일 때 실수로 보도 경계선을 넘어가면 “위험하오니 안전선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는 안내 음성도 나온다.



성동구 행당동 ‘스마트 횡단보도’

#. 양천구 목동5단지에 살고 있는 B씨는 몸이 불편해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차를 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작년에 주차 감지센서와 CCTV로 불법주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가 설치된 후로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게 편리해졌다. 차량 운전자들의 양해 주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할 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시티 특구’로 성동·양천구를 지정한 뒤 1년여 만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는 교통·안전 분야 사업으로 보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4개 횡단보도에 다양한 신기술 센서가 집약된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하는 사업을 벌였다.

스마트 횡단보도에선 보행신호등에

따라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이 녹색·빨간색으로 신호를 알린다.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차도 가까이 접근할 경우 위험을 알리는 경고 음성이 나온다.

성동구청과 무학여고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전인 2019년 9월 1~15일과 후인 2019년 10월 16~31일의 차량정지선 위반 건수를 비교하면 2만 4000건에서 7000건으로 70% 넘게 줄었다.

양천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서울시

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하면 음성안내로 불법주차임을 알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를 시험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감지센서로 주차를 인식하고 CCTV로 차량번호를 조회해 등록된 장애인차량인지 확인한다.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다른 구역으로 이동 주차해 주세요”라는 음성 안내와 함께 경광등이 켜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80면에서 올해

1월 14~30일 시험한 결과 주차를 시도한 3628대의 차량 중 28%인 1016건이 출차했고, 이는 모두 비장애인 차량이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밖에 양천구에서는 독거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와 스스로 고장 유무를 관리하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동구에서는 자동차 도장업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감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원격관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내 성동구에서는 ‘스마트 스킵존 서비스’, 양천구에서는 ‘가로등 활용 전기충전 서비스’ 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2019~2021년 시비 30억원과 구비 6억원이 투입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란 멀리 있는 미래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삶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생

車 환경부담금 내달 20일까지 납부시 감면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유도 부담법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3월 신고시 2기분 부과금 10% 할인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20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올해 1월 연납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1·2기분 모두에 대해 10% 감면을 받지만 3월 연납신고와 납부신고를 할 경우 2기분 부과금만 10% 할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이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

로 내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이동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지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 등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종교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천지, 코로나19확진자 소굴... 명단 정확도 의문”

박원순 서울시장 7대 종교인 만남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참석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신천지는 일종의 확진자들의 소굴”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아직 전체 신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오후에 제출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그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렇지 않아서 큰 문제”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신천지 시설 폐쇄나 명단 요구는 종교활동 통제·억압이 아니다”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진원지 역할을 한 부분을 사사롭게 넘길 것이 아니라, 밀교적 성향을 가지고 이웃 종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교인들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박 시장에게 대책을 문의했다.

이홍정 목사는 “마트에 마스크 구입률이 굉장히 길게 생기는데, 앞으로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마스크를 배포하는 내용이 있나”고 물었다.

이 목사는 “마스크를 무상 지원받아야 할 계층이 많은 텐데, 이 부분을 판매로 대신하기보다 해외의 민간 국제 구호단체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그런 마스크는 당연히 받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며 “서울시는 건강 취약계층에 직접 나눠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가 1천만개 이상 생산되고 있어서 수량으로는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며 “수급 과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점, 일부에서 매점매석이 여전한 점, 상당수는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보급 과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며 “차라리 행정기관이 보급제를 하면 사재기도 없지 않겠나”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의료 인력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

지자체서 조정업무 진행 가능

서울시는 지난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90건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서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가맹점 76건, 대리점 14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13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

게 됐다.

분쟁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11건 ▲거래상 지위남용 8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위원회가 처리해 절약된 비용이 5억9000여만원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시는 지난해 2471개(전국 대비 39%)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